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 성평등한 디지털 세계 구축을 위한 독일 정부 이니셔티브<sup>1)</sup>

- 독일 연방정부가 세 번째 성평등 보고서 주제를 '디지털 성평등'으로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안에서 남녀가 동등한 실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설정해야 하는지, 앞으로 성평등한 디지털화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평등 보고서는 독일의 성평등 조치 권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1,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발표했다. 성평등 보고서는 경제학, 공학, 법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 현재 독일 디지털 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여러 앱, 마이크로 칩 및 기타 혁신 기술은 거의 남성에게 의해 독점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여성의 관점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MINT(수학, 정보통신,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여성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있는 여성이 관련 직업 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이니셔티브 'Komm mach MINT(민트하자!)'는 여성이 학교나 회사 등에서 MINT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교육연구부는 '민트와 함께하자'에 매년 약 3백만유로(한화 약 39억 6,291만원)를 제공하고 있다.
-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도 마찬가지로 낮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스타트업의 70%가 남성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저평가되어있는 것은 사회보장 부족과 같은 구조적 장벽 그리고 남성이 주도하는 디지털 기업이 이미지와 같은 성별고정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더 많은 여성이 창업하려면 지금보다 나은 자본금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전문가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늘어난 홈오피스나 유연근무가 자녀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고 있어, 남성이 가족 돌봄 업무를 동일하게 분담할 경우에만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짚었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해원 독일통신원

다. 위원회는 독일에서 집안일이나 가족 병간호 등 무급 돌봄 업무를 남성보다 여성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홈오피스 등 디지털 작업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급 돌봄 작업에 대한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성평등한 디지털 세계 형성'이란 주제로 발표된 이번 성평등 보고서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러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전문가위원회가 꼽은 디지털 작업 세계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권장사항 중 일부이다.

- 이니셔티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Initiative Klischeefrei)

<https://www.klischee-frei.de>

- 전문가위원회는 소녀와 여성이 IT 회사에 합류하거나 과학 및 기술, 컴퓨터를 공부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찍 길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이 성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직업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Initiative Klischeefrei)'가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공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청소년이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대학, 기업 및 교육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일자리 선택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 일자리 및 전공 선택에 관한 정보지 발행' '젠더 차이를 뛰어넘은 일자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이 이니셔티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교육·연구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이니셔티브 여성 기업(Frauen unternehmen)

<https://www.frauenunternehmen.de>

- 독일 디지털 산업 내 여성 비율 16%, 모든 스타트업의 70%가 남성팀으로 구성된 등의 문제를 두고 전문가위원회는 오래된 성별 고정관념과 일·가정 양립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여성 창업가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여성이 기업가나 창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 여성 기업(Frauen unternehmen)'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현재 약 200명의 여성 기업가들이 주축이 돼, 되도록 많은 여성이 자신의 기업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여학생, 직업훈련생, 대학생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과 만나는 자리를 열어 여성 사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여성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러 여성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를 맺을 기회를 얻고 있다.

- 디지털 성폭력 문제 대응

-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폭력과 증오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독일에서 디지털 폭력 및 성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위협, 동의되지 않은 사진·영상 촬영, 신분 도용, 음란물 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이는 현재 독일 여러 형법 조항에 따라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음란물 사진 전송은 「형법」 184조, 디지털 채널 통제는 형법 240조 및 241조, 사이버 스토킹은 238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과 위협은 185조, 동의하지 않은 사진 촬영은 사생활 침해와 연관된 형법 20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위원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상담 인프라 확충과 전문상담소 및 폭력 보호시설 직원의

디지털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법 집행기관,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젠더매거진 <MEIN TEST GELAENDE> <https://www.meintestgelaende.de/>
  - 전문가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표현이 이뤄지고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이 필요한 점은 짚으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젠더매거진 'MEIN TEST GELAENDE(meintestgelaende.de)'을 소개했다. 이 매거진은 모든 청년에게 비디오, 시, 노래, 랩 또는 만화 등을 통해 젠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매거진을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600여 명의 필자가 참여해왔으며 주로 젠더, 평등, 정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룬다. 이 외에도 매거진에서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문화주간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매거진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지원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 bmfsfj(2021. 6. 9.), "Ministerin Lambrecht: Digitalisierung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nutz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inisterin-lambrecht-digitalisierung-fuer-die-gleichstellung-von-frauen-und-maennern-nutzen.182034>, 접속일자: 2021. 6. 27.
- bmfsfj(2021), "Digitalisierung geschlechtergerecht gestalten,"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berichte-der-bundesregierung/dritter-gleichstellungsbericht?view=>, 접속일자: 2021. 6. 27.
- bmfsfj(2021), "Was sind Gleichstellungsberichte?," <https://www.dritter-gleichstellungsbericht.de/de/topic/69.die-gleichstellungsberichte.html>, 접속일자: 2021. 6. 28.
- bmfsfj(2021), "Die Initiative FRAUEN unternehmen," [https://www.existenzgruenderinnen.de/DE/Verknuepfung/Frauen-unternehmen/Initiative/Initiative\\_node.html?sessionid=5E8396A825B33B9DCE9976A82BBF8C3F](https://www.existenzgruenderinnen.de/DE/Verknuepfung/Frauen-unternehmen/Initiative/Initiative_node.html?sessionid=5E8396A825B33B9DCE9976A82BBF8C3F), 접속일자: 2021. 6. 28.
- bmfsfj(2021), "DIGITALE GEWALT: ANGRIFFE AUS DEM NETZ," <https://staerker-als-gewalt.de/gewalt-erkennen/digitale-gewalt-erkennen>, 접속일자: 2021. 6. 28.

## 독일, 성평등한 언어 사용 논의 현황

- 2021년 7월 13일,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기내 인사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신사숙녀 여러분(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표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루프트한자는 승객에게 건네는 인사말을 시작할 때 '신사 숙녀 여러분' 대신 '탑승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또는 오후/저녁)입니다'는 문장으로 대체한다. 승객 호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며, 정해지는 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항공, 스위스항공, 유로윙스를 포함하여 루프트한자 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된다.
- 유럽성평등기구(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는 젠더 중립적 언어에 관해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에 관한 언급 없이 '사람'을 고려하는 언어"로 정의한다. 유럽의회에서는 2018년, 젠더중립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편견, 차별 또는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젠더 중립 단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독일어는 한국과 달리 모든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뉜다. 명사 외에 관사에도 성이 존재한다.

기본값은 남성형이다. 예를 들어 남성 의사는 ‘Arzt’이며 여성 의사는 ‘Ärztin’으로 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를 칭하는 단어를 쓸 때 ‘Arzt’를 많이 사용한다.

- 독일 정부 차원에서 성평등언어 또는 젠더중립언어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이다. 독일 주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노버시가 2019년 1월 18일, ‘성평등한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하노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정 서신, 예를 들어 이메일과 서신, 양식과 법률 텍스트, 인쇄물과 전단지, 보도자료 등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언어를 사용한다. 가이드라인은 하노버시의 여성 및 성평등국, 젠더다양성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부서, 독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있는 플렌스부르크시의 성평등담당관 등의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하노버 시장은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며, 새로운 언어 가이드라인 마련은 성별 구분을 떠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하노버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은 가능한 한 성별/젠더 구분 없이 포괄적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남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Herr(헤어)’나 여성을 지칭할 때 쓰는 ‘Frau(프라우)’처럼 특정 성을 지칭하는 표현 사용을 배제한다. 남녀로 이뤄진 부부 관계, 예를 들어 쉘츠 부부(Herr und Frau Schulz)란 형식 대신에 아니타 쉘츠 씨와 콘라드 쉘츠 씨(Anita Schulz und Konrad Schulz)처럼 전체 이름을 적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아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부를 때에는 부부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쉘츠 가족(Familie Schulz)으로 쓴다.
- 이어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수신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이름을 모르는 담당자 등에게 문서나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친애하는 남성 또는 여성 00에게(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대신 성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인사말, ‘Guten Tag(안녕하세요)’ 또는 ‘Liebe Gäste(친애하는 손님)’ 사용을 권한다.
- 단어 구조를 바꿔 성별이 표기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만들었다. ‘여성 심리학자의 조언(Rat der Psychologin)’ 대신 ‘심리학적 조언(psychologischer Rat)’, 남성 형을 기본으로 한 ‘프로젝트 참가자(die Teilnehmer des Projektes)’ 대신 중성단어를 사용한 ‘프로젝트팀(das Projektteam)’ 등이 이에 속한다.
- 하노버시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젠더포괄적인 언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별표(\*, 독일에서는 젠더 별표라 부른다) 사용을 권한다. 남성과 여성 어미 사이에 별표(\*) 표기를 해 성별 구분을 없애는 방법이다. 남성 엔지니어(Der Ingenieur)나 여성 엔지니어(die Ingenieurin) 대신 성별 구분이 없는 엔지니어(Ingenieur\*in)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친애하는 여성 동료와 남성 동료들에게(Liebe Kolleginnen und Kollegen)’ 대신 ‘친애하는 동료들에게(Liebe Kolleg\*innen)’로 쓰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한다.
- 이 방법은 최근 몇 년간 독일 언론에서도 시도한 표기 방법이다. 남성 경찰을 칭하는 ‘Polizist’와 여성 경찰 ‘Polizistin’의 어미 사이에 별표(\*)를 넣어 ‘경찰(Polizist\*in)’로 쓰는 방법이다. ‘동료(Kolleg\*in)’나 ‘은퇴 후 연금생활자(Rentner\*in)’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단어다.
-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표기법 사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젠더 중립적 단어 사용은 중요하나, 문법 변경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경찰을 뜻하는 ‘Polizistin’과 젠더 중립성을 넣어 남성과 여성 경찰 모두를 아우르는 ‘Polizist\*in’, 이 두 단어는 글로 쓸 때는 별표(\*)를 식별할 수 있으나 발음은 ‘폴리치스틴’으로 같아 말하거나 들을 때 구분이 어렵다.
- 이를 두고 독일 라디오방송국 ‘Nova’에서는 별표(\*)를 넣은 젠더중립 단어 사용을 두고

청취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언어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고 자주 사용될수록 습관화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회가 변하면 언어도 변하며 그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명확성이 떨어지는 안 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 일부 언어학자들은 젠더 중립 언어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약 100명의 작가 및 학자 등으로 구성된 독일언어협회(Verein Deutsche Sprache e.V.)는 단어 중간에 별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독일어 문법과 철자 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원칙적으로 차별 없는 언어 사용을 지지하지만 별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언어적 관점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다른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사고방식 제거와 언어 평등을 이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독일어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지속시키고 남자 또는 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알렉산드라 셀레(빌레펠트 대학)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루프트한자 그룹 선택과 같은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언어 사용과 같은 상징적 조치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나 조직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어표기법위원회’는 독일 전역에서 많은 기관이 언어 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젠더 별표(\*) 사용, 가능한 남성형을 기본으로 쓰지 않기 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표기법이 공식 맞춤법 사용에 관한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2년에 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 참고문헌 ·

-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Public Report 2019(2019), <https://www.canada.ca/content/dam/csis-scrs/documents/publications/PubRep-2019-E.pdf> (접속일: 2021.08.18.).
- CBC(2018.04.28.). “Advocates call for action in wake of Toronto van attack, domestic violence homicides”,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womens-advocates-call-for-action-after-van-attack-1.4639326> (접속일: 2021.08.18.).
- CBC(2020.05.20.). “Terror charges in alleged ‘incel’-inspired stabbing could force reckoning of Canada’s terrorism laws: experts”,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incel-canada-terrorism-1.5577015> (접속일: 2021. 8.18.).
- Ging, Debbie, and Eugenia Siapera(2019). “Gender Hate Online Understanding the New Anti-Feminism.” In.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Imprint: Palgrave Macmillan.
- Global News(2020.06.08.), “RCMP adding incels to terrorism awareness guide”, <https://globalnews.ca/news/7021882/rcmp-incel-terrorism-guide/> (접속일: 2021.08.18.).
- Kayla Preston, Michael Halpin, Finlay Maguire(2021). “Men and Masculinities, The Black Pill: New Technology and the Male Supremacy of Involuntarily Celibate Men”,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1097184X211017954> (접속일: 2021.08.18.).
- Newsweek(2020.05.20.). What is ‘Incel’ Movement? Teenager Charged in Canada’s First Terror Case Linked to Misogynist Movement. <https://www.newsweek.com/what-incel-movement-teenager-charged-canadas-first-terror-case-linked-misogynist-movement-1505557> (접속일: 2021.08.18.).
- RCMP(2020.05.19.). Updated Charge, Young Person Charged with First-Degree Murder and Attempted Murder, Updated to First-Degree Murder- Terrorist Activity and Attempted Murder- Terrorist Activity, Homicide #12/2020, Dufferin and Wilson Avenue, <https://www.rcmp-grc.gc.ca/en/news/2020/dufferin-and-wilson-avenue> (접속일: 2021.08.18.).
- Sian Tomkinson, Tael Harper & Katie Attwell(2020), “Confronting Incel: exploring possible policy responses to misogynistic violent extremism,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2, 152-169, DOI: 10.1080/10361146.2020.1747393 (접속일: 2021.08.18.).



## 영국의 성폭력 피의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

### -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sup>2)</sup>

- 영국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rape victim)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 중 1.6%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성폭력 피의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미미하다. 이와 함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 절반가량이 수사가 시작된 뒤 형사 소송을 철회할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지쳐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통계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기소되는 비율을 높여 더 많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본문에서는 영국의 연도별 성폭력 사건 기소 건수와 성폭행 사건 경찰 신고 현황 등 통계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소송을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후 영국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영국 성폭력 사건 검찰 기소, 4년 만에 약 20% 감소
  - 영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성폭력 사건 건수가 꾸준히 감소했다. 영국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이 2019년 발간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 보고서(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port, 2018-2019)’에 따르면, 2016년 68,462건이었던 유죄 인정(Guilty pleas) 건수가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55,331건으로 4년 만에 19% 떨어졌다.
  - 검찰의 사건 기소 건수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사건을 기소해 법원으로 넘긴다. 검찰 사건 기소 건수가 낮으면 그만큼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받는 피의자 숫자도 줄어든다.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6월 18일 ‘성폭력 대응 점검(Response to rape overhauled)’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과 검찰 기소 건수를 2016년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도 2016년 이후 법원 앞에 선 성폭력 피의자 숫자가 줄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료 출처: Crown Prosecution Service(2019.09.12.),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port, 2018-2019.〉

2)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 소송 과정이 고통스러워 포기하는 피해자들

-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 과정에서 형사 소송을 철회하는 것도 검찰의 성폭력 사건 기소 건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 정부가 올해 6월 발간한 보고서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진행을 철회해 수사가 중단된 비율이 2016년엔 42%였지만, 2019년에는 57%로 15% 늘었다. 성폭력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피의자가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에 소송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2019년 3월부터 2년 넘게 공을 들인 이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검찰의 기소 건수 등 다양한 통계와 피해자 인터뷰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성폭력 사건 건수가 2016년 이후 줄어든 이유를 분석했다.
- 형사 사건 피해자와 증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독립 기관인 영국피해자기구(The Victims’ Commissioner for England and Wales)는 2019년 8월, 피해자가 사건 수사와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소송을 철회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놔다. 영국 피해자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성폭력 피해자 신고 센터인 ‘Rape Crisis’를 통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수사 과정에서 소송을 철회한 사건 521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소송을 철회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26%는 “형사법 체계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too distressing)”, 21%는 “학교나 고용 정보, 부정적인 언론 보도, 병원 기록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소송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영국 피해자기구는 “이 설문 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이 형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쳐 포기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영국 정부의 대책은? 사건 기록표와 소테리아 작전

- 영국 정부도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관(Lord Chancellor)이자 법무부 장관인 로버트 버클랜드는 6월 18일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사법 체계의) 구조적 실패 때문에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 지원 강화, 철저한 사건 수사, 강력한 기소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사과했다.
-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6개월 주기로 발간하는 사건 기록표(scorecards)다. 사건 기록표는 성폭력 수사 시의성, 피해자의 수사 참여 정도, 사건의 신빙성 등 구체적인 척도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법원 판결 결과 등을 점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키트 말하우스 범죄치안부 차관(Minister for Crime and Policing)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별도로 담당해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 기구, 가정폭력기구, 피해자 그룹, 형사 사법 기관과 매달 회의를 연다.
- 이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에는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 기록 전체를 ‘디지털 수색(digital strip search)’해서 안 되며, 사건과 관련이 증거만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24시간 안에 돌려줘야 하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해야 함.
- 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s (ISVA)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ISVA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피해자 심리 상담, 피해자가 원하면 사회 복지 정책, 주거 지원까지 연결하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가다)
- 첫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정보 제공
- 또한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파일럿 정책인 ‘소테리아 작전(Operation Soteria)’을 실행한다. 소테리아 작전이란 경찰과 검찰이 초동 수사를 할 때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성폭행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의자의 반복된 범죄 행위나 수상한 행동에 집중하는 수사 모델이다. 영국 정부는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 보고서에서 “6개월간 소테리아 작전을 실행해 성공할 경우 경찰과 검찰 전체의 새로운 수사 모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 정부는 지난 4년간 검찰이 기소하는 성폭력 사건 숫자가 20% 가까이 감소해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피의자가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새롭게 내놓은 사건 기록표, 소테리아 작전 같은 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GOV.UK(2021. 6. 18.), “Response to rape overhaul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sponse-to-rape-overhauled>, 접속일자: 2021. 6. 23.
- The Guardian(2021. 6. 17.), “Ministers apologise to rape victims and promise overhaul of syste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jun/17/ministers-apologise-to-rape-victims-and-promise-reform-in-review>, 접속일자: 2021. 6. 23.
- BBC(2021. 6. 20.), “Why are rape prosecutions failing?,” <https://www.bbc.com/news/uk-48095118>, 접속일자: 2021. 6. 23.
- Crown Prosecution Service(2019.09.12.),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port, 2018-2019,”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cps-vawg-report-2019.pdf>, 접속일자: 2021. 6. 23.
- HM Government(2021. 6. 18.), “The end-to-end rape review report on findings and action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4816/end-to-end-rape-review-report.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4816/end-to-end-rape-review-report.pdf), 접속일자: 2021. 6. 23.
- The Victims’ Commissioner for England and Wales(2019. 8. 15.), “VC analysis of victims’ reasons for withdrawing sexual offence complaints,” <https://s3-eu-west-2.amazonaws.com/victcomm2-prod-storage-119w3o4kq2z48/uploads/2019/08/OVC-analysis-victims-complaints-withdrawal.pdf>, 접속일자: 2021. 6. 23.

## 영국의 임신 및 출산 선택권 정책 현황

- 영국 정부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인력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2021년 7월 말부터 경구 피임약이 출시된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프로게스테젠 경구 피임약(progestogen-only contraceptive

pill)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영국의 난자 냉동 기간을 더 늘려 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영국 하원 보건복지위원회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가 2021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연도별 신생아 사망률과 출산 서비스 현황을 되짚어 본다. 이후 변화된 경구 피임약 구매 정책의 내용과 이 결정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국의 현행 난자 냉동 정책을 검토하며 임신과 출산 선택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 ■ 영국 정부, 출산 서비스 개선에 246만 파운드 투입

-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는 7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 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246만파운드(약 38억 8천만원)를 투입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예산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산부인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영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1980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1,000명당 12명이 었던 신생아 사망률이 2000년엔 1,000명당 5.6명으로 53% 감소했고, 2019년엔 1,000명당 3.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망 한 신생아 숫자는 총 2,39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영국 통계청은 1세 이하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 사망 통계에 포함한다.
-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신생아 사망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산모 및 신생아 사망률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신생아 1,000명당 사망률이 2.1명으로 영국보다 1.6명 적다. 영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생아 사망 건수를 천 명대로 낮춰야 한다.
- 영국 의회는 NHS의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이 영국의 신생아 사망률을 현 수준에서 정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영국 하원 보건복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6월 29일 발표한 보고서 ‘영국의 출산 서비스 안전(The safety of maternity services in England)’에 따르면, 영국왕립조산사학회(Royal College of Midwives)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산사 10명 중 8명(전체 응답자의 83%)에 교대 근무하는 의료진과 각 산부인과 부서에 순환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해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는 영국 조산사 1,400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4월 21일 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잉글랜드에만 조산 사 23,66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조산사 1,932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49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의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조산사 인력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산모들이 출산할 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마취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진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연간 예산을 2억~3억5천만파운드(약 3,181억~5,566억원)로 늘려 산부인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영국에서 처방전 없이 프로세스토젠 경구 피임약 구매 가능

- 영국에서 7월 말부터 프로세스토젠 경구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경구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영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여성들이 피임과 임신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식약처와 비

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은 7월 8일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프로세스토젠 경구 피임약은 영국에서 ‘미니필(mini pills)’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영국에 사는 여성들은 약국에서 약사와 간단한 상담을 한 뒤 한 달 치 피임약을 약 7.50파운드(약 12,000원)에 살 수 있다. 구매 가능한 브랜드는 로비마(Lovima)와 하나(Hana) 두 가지다. 프로세스토젠 피임약에는 데스게스토렐(desogestrel)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MHRA는 이 성분이 대부분 여성들에게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 MHRA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 올해 2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MHRA에 따르면, 공청회를 통해 총 494개 의견이 접수됐고, 전체 접수된 의견 중 80%가 프로세스토젠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사는 내용에 찬성했다.
- 영국왕립산부인과협회(RCOG,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의 에드워드 모리스 회장은 “MHRA의 결정은 여성들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 앞으로 여성들이 피임약을 살 때 불필요한 장애물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많은 여성들이 기본적인 여성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힘들어했고,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엄마와 아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한다”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 ■ 난자 냉동 기간 10년 제한, 연장 목소리

- 현재 영국에서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부인과학회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보관된 난자는 관련 법인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 1990」(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료가 일시 중단된 불임 치료 환자들만 대상으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해 임신을 미루기 위해 난자를 냉동한 여성들은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2020년 9월 ‘영국의 난자 냉동(Egg freezing in the UK)’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난자 냉동 보관 기간 연장이 여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나이가 더 어릴 때 건강한 난자를 냉동해 이후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남성의 생식 능력은 노화에 의한 영향을 덜 받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생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 냉동 기간을 늘리면 여성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영국왕립산부인과협회도 2020년 2월 27일 ‘영국의 난자 냉동 보관 기간 법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알려진 새로운 난자 냉동 기술이 개발돼 앞으로 난자를 무기한 냉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10년 제한 정책 때문에 여성들이 난자가 가장 건강한 20대에 냉동하는 대신 난자의 질이 다소 떨어진 30대 때 냉동하면서 임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 영국 의회가 2021년 6월, NHS 산부인과 인력 부족 현상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한 뒤 영국 정부는 관련 인력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 246만파운드를 투입했다. 2021년 7월 말부터 영국에서 여성들이 처방전 없이 경구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여성의 피임과 임신 선택권을 강화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10년으로 제한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GOV.UK(2021. 7. 4.), "Government pledges 2.45 million to improve childbirth car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ledges-245-million-to-improve-childbirth-care>, 접속일자: 2021. 7. 25.
- The Royal College of Midwives(2020. 11. 16.), "Fears for maternity as staffing shortages hit safety and morale say RCM," <https://www.rcm.org.uk/media-releases/2020/november/fears-for-maternity-as-staffing-shortages-hit-safety-and-morale-says-rcm>, 접속일자: 2021. 7. 25.
-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2021. 6. 29.), "The safety of maternity services in England,"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6578/documents/71418/default>, 접속일자: 2021. 7. 25.
- GOV.UK(2021. 7. 8.), "First progestogen-only contraceptive pills to be available to purchase from pharmac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first-progesterone-only-contraceptive-pills-to-be-available-to-purchase-from-pharmacies>, 접속일자: 2021. 7. 25.
- The Guardian(2021. 7. 8.), "Contraceptive 'mini pills' to be offered over the counter in UK,"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jul/08/contraceptive-pill-will-be-available-over-the-counter-for-the-first-time>, 접속일자: 2021. 7. 25.
-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2020. 9.), "Egg freezing in the UK,"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gg-freezing-in-the-UK.pdf>, 접속일자: 2021. 7. 25.
-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2020. 2. 27.), "UK law on storage limit for egg freezing is too restrictive, say RCOG and BFS," <https://www.rcog.org.uk/en/news/uk-law-on-storage-limit-for-egg-freezing-is-too-restrictive>, 접속일자: 2021. 7. 25.
- OECD.Stat(2021. 7. 2.), "Health Status: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16>, 접속일자: 2021. 7. 25.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2. 24.), "Child and infant mortality in England and Wales: 201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deaths/bulletins/childhoodinfantandperinatalmortalityinenglandandwales/2019>, 접속일자: 2021. 7. 25.

## 프랑스, 15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법 제정<sup>3)</sup>

- 2021년 3월, 프랑스 하원에서는 만장일치(찬성 94표, 반대 0표)로 만 15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를 합의 여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발의된 것으로, 의회에서 오랜 기간 수많은 수정 및 논의를 거쳐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
- 프랑스에서는 과거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8년 한 28세 남성이 공원에서 만난 11세 소녀를 본인 아파트로 데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여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낮은 형량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는 본격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법 마련에 관한 논의가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 당시 피고인 남성 측 변호인단은 소녀가 자발적으로 남성을 따라갔고 상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녀 측 변호인단은 11세로 성관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지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다고 침례하게 대립했다. 법원은 결국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작성 :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에마뉴엘 마크롱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 강화를 추진했고, 내각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초안 마련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오가기도 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15세를 추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세로 법안에 반영됐다.
- 해당 법이 한창 의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이던 올해 초에도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관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2월, 프랑스 파리 소방관 20여명이 2008년 당시 13세였던 소녀를 2년 넘게 무려 130차례가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프랑스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고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중 단 3명만이 기소되었고, 그들 역시 강간이 아닌 성추행으로 형량이 줄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 대법원은 강간으로 확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이를 계기로 강간 규정 및 처벌에 관한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해당 판결은 의회에서 15세 이하 성관계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불과 며칠 뒤 내려진 판결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그동안 위협의 유무가 아니라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강간 행위를 판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을 추진해왔다. 합의 없이 일어난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하는 유럽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있다. 이번 4월에 제정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기존 법적 기반이 강간을 규정하는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위협 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라고 정의하고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전 형법에서도 기준 연령은 같은 15세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검찰 측에서는 강간 기소 시 서로 합의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피고가 협박이나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했다. 입증에 실패하면 가해자는 기존 형법 제227-25항에 따라 강간이 아닌 15세 이하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최대 5년형과 75,000유로(한화 약 1억 113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에릭 듀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회에 역사적인 법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손댈 수 없으며, 이제 성인 그 누구도 15세 이하 아동에게 서로 합의해서 행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15세 이하 강간에 관한 유죄 확정시 형량은 최대 20년에 이른다. 논의 당시 의회 일각에서는 15세 연령 규정을 못 박으면 서로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또래 간 합의된 성관계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따라서 해당 법에는 일명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을 포함했는데, 5살 차이 내 개인 간 성관계는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은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다각도에서 성범죄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 법에서는 근친관계이면서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온라인 아동 성도착자 또는 성추행 규제도 강화됐다. 온라인상에서 15세 이하 아동에게 접근해 정신적으로 길들이고 성행위를 취하게끔 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15만유로(한화 약 2억 228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동의 없이 타인의 치마나 옷 사이에 카메라를 대고 몰래 촬영하는 자는 징역 1년형과 최대 15,000유로(한화 약 2,023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프랑스는 이미 2018년에도 한차례 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한 바 있다. 우선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소멸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예를 들어 당시 18세 미성년자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48세가 될 때까지 해당 피해를 신고하고 기소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캐롤링(catcalling)과 같은 성추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최대 750유로(한화 약 102만원)의 벌금, 특히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경우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03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 제정 이후 실제로 관계당국이 공공장소 성추행으로 700건이 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8월 발표 기준).
- 프랑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그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해당 법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발효 이후 실제 다양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 Amnesty International(2020. 12. 17.), "Let's talk about 'yes': Consent laws in Europe," <https://www.amnesty.org/en/latest/campaigns/2020/12/consent-based-rape-laws-in-europe>, 접속일자: 2021. 6. 26.
- France 24(2021. 4. 15.), "French parliament approves landmark bill setting age of sexual consent at 15,"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10415-french-parliament-approves-landmark-bill-setting-age-of-sexual-consent-at-15>, 접속일자: 2021. 6. 26.
- Le Monde(2021. 4. 15.), "Violences sexuelles : le Parlement adopte une loi fixant le seuil de nonconsentement à 15 ans,"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1/04/15/violencessexuelles-le-parlement-adopte-une-loi-fixant-le-seuil-de-non-consentement-a-15-ans\\_6076933\\_3224.html](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1/04/15/violencessexuelles-le-parlement-adopte-une-loi-fixant-le-seuil-de-non-consentement-a-15-ans_6076933_3224.html), 접속일자: 2021. 6. 26.
- Politico Europe(2021. 3. 16.), "France moves toward setting 15 as age of consent. What took it so long?," <https://www.politico.eu/article/france-moves-toward-setting-15-as-age-of-consent-what-took-it-so-long>, 접속일자: 2021. 6. 26.
- Reuters(2019. 8. 6.), "France fines more than 700 in first year of 'cat-call' law,"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aw-harassment-idUSKCN1UW1NY>, 접속일자: 2021. 6. 26.
- The Government of France(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Against sexual and sexist violence," <https://www.gouvernement.fr/en/against-sexual-and-sexist-violence>, 접속일자: 2021. 6. 26.
- The Guardian(2018. 2. 14.), "French girl, 11, 'not a child' say lawyers for man, 29, accused of sexual abu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feb/14/french-girl-11-not-a-child-say-lawyers-for-man-29-accused-of-sexual-abuse>, 접속일자: 2021. 6. 26.
- The Guardian(2021. 03. 18.), "Firefighters should not face charge of raping girl, French court rule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8/firefighters-should-not-face-charge-raping-girl-french-court-rules>, 접속일자: 2021. 6. 26.

## 프랑스, 기업 내 여성임원 40% 할당제 법안 하원 통과

- 지난 5월 12일, 프랑스 하원 의회는 2030년까지 기업 내 의사결정직에 여성 비율 40%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당에 상관없이 61명 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본 법안은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설정하고 각종 입법 및 정책 이행을 추진해 왔다.



- 이번 법안은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고위 의사결정직 내 여성 임원 비율을 2027년까지 최소 30%, 2030년까지 40%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법안 하원 통과를 두고 엘리자베스 모레노(Elisabeth Moreno) 양성평등정책 장관(Gender Equality Minister)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사실 프랑스는 이미 여성임원 할당제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프랑스는 2017년부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2020년까지 임원직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임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Copé-Zimmermann law)을 시행한 바 있다. 입법 당시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그 결과 원안에 비해 적용내용과 구속력이 다소 축소되어 완성된 법이었다. 당시 여성임원 할당제 법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점진적 도입안을 채택했는데, 2011년 제정 당시 여성이 임원 명단에 한 명도 없는 경우 다음 총회까지는 한 명 임명할 것, 2014년 기준 이사급(director) 여성임원 비율이 최소 20%이상일 것, 2017년 1월부터는 여성임원 비율 최소 40%를 달성하고 2020년 1월부터는 5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 2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으로 확대 적용했다.
- 위와 같이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법을 실시한 결과, 프랑스 주가지수(CAC40) 상장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009년 10%에서 2019년 45%가량으로 크게 상승했고, 그 결과 프랑스는 아이슬란드(46%)에 다음으로 세계에서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여성임원 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법안이 상정되었다.
- 그러나 이사회나 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고위임원직 내 여성 비율은 아직 낮고 약 2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모레노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여성임원 할당제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깊숙히 고착화된 성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의회 내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Delegation for Women's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마리-피에르 리생(Marie-Pierre Rixain) 의장은 법안 통과 후 감격하면서도, 아직 프랑스 사회에 유리천장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상·하원에는 1999년 조직된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가 양성평등 관련 입법안을 검토 및 발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반면 이번 법안 통과 후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여성임원 할당제 연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정부가 기업의 선택권에 간섭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안도 이전처럼 벌금 조항이 명시되었는데, 2030년 발효 이후 2년 내 여성임원 비율 40%를 채우지 못하면 총 임금계산서(wage bill)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 조항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법안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일부 기업에는 수천유로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 이번 법안은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은행(BpiFrance)에서 55세 이상 여성도 본인 은행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갖고 임금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배우자가 아닌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한부모 가정의 보육서비스 지원, 임신부 근로여성의 자택 또는 원격 근무 지원도 포함되었다.
-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6개 투자그룹이 모여 고위급 경영직에서의 남녀 균형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30% Club France Investor Group’를 발족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본래 2011년 영국에서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대상 투자기업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조직된 네트워크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조직된 그룹은 프랑스 시가총액 상위 120개 기업(SBF 120) 내 고위 임원직에서 여성 리더 비율을 2025년까지 최소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아닌 재계에서 자발적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여성대표성 증대를 이루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그룹들은 프랑스 내 기업들이 경영진 구성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노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올해 하원을 통과한 기업 내 의사결정직 여성임원 40% 할당제 법안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여성임원 할당제의 연장선상에서 있다. 이전 법을 이행하면서 실제로 프랑스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도 향후 의사결정직 내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목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해 볼 만 하다.

#### • 참고문헌 •

- Fr24 News(2021. 5. 15.), "France unanimously votes gender quotas for executive leadership," <https://www.fr24news.com/a/2021/05/france-unanimously-votes-gender-quotas-for-executive-leadership-fr.html>, 접속일자: 2021. 7. 25.
- The 30% Club(2020. 11. 11.), "Six asset managers launch the 30% Club Investor Group in France," <https://30percentclub.org/press-releases/view/six-asset-managers-launch-the-30-club-investor-group-in-france>, 접속일자: 2021. 7. 25.
- The Guardian(2013. 12. 23.), "French firms warned of fines for not complying with gender equality law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dec/23/french-firms-fine-gender-equality-laws>, 접속일자: 2021. 7. 25.
- RFI(2021. 5. 13.), "French MPs approve quotas for more women in corporate management," <https://www.rfi.fr/en/france/20210513-french-mps-approve-quotas-for-more-women-in-corporate-management>, 접속일자: 2021. 7. 25.
- Soulier-Avocats(2016. 11. 29.), "Update on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designed to increase the presence of women in the boardrooms of large French companies," <https://www.soulier-avocats.com/en/update-on-the-application-of-the-rules-designed-to-increase-the-presence-of-women-in-the-boardrooms-of-large-french-companies>, 접속일자: 2021. 7. 25.

## 스페인, 성범죄 적용 및 처벌 강화 법안 승인<sup>4)</sup>

- 2021년 7월 초, 스페인 정부는 성폭력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고 피해자 지원 및 성범죄 예방을 다각도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승인한 법은 기존의 성범죄를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규제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 법안은 의회의 최종 논의 및 투표를 거쳐야 하며, 2021년 연말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 현재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정책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성평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산체스 총리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여성에게 더욱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6년 다섯 명의 남성이 18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여 스페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4) 작성: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성폭행이라 보지 않고 훨씬 경미한 수준의 성추행(sexual abuse)이라고 해당 사건을 해석했으며, 그에 따라 9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판결 근거는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녹화했는데 판사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성행위에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 판결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으며 스페인 곳곳에서 성폭행을 재정의하고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송부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고등법원의 원심 9년형에서 형량을 늘려 15년형, 피해자에게 총 10만유로(한화 약 1억 3천만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현 스페인 형법 제178조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해 타인의 성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를 성추행(sexual assault)으로 보고 1~5년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79조에서 강간(rape)은 6~12년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부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은 12~15년형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명백하게 비인륜적 폭행이나 위협, 2인 이상의 가해 행위, 장애나 질병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직장이나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성적 접촉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 행위의 경우 형법 제184조에서 3~5개월 징역형이나 벌금형, 특히 고용이나 업무상의 수직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5~7개월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스페인의 기존 형법에서 이미 합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추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형법에서 ‘합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강간죄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폭력이나 위협을 겪었고 저항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다.
- 이번에 정부에서 승인한 법안은 성관계에서 합의가 관건이며, 개인의 의지를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했을 때에 한해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어로는 “solo si es si (only yes means yes),” 즉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만 진정한 합의이며, 합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 이번 법안이 승인된 이후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Equality Minister)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 법안에서는 피해자를 위주로 사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법이 될 것이며, 피해 당시 침묵하거나 수동적이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명백한 합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 이외에도 성범죄 관련 규정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캣콜링(catcalling), 스토킹, 강제 결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공공장소 성추행 범죄의 경우 벌금, 가택연금, 사회봉사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 또한 24시간 성추행 피해 신고전화 서비스 운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등의 조치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100%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24시간 핫라인 전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핫라인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요령 안내, 상담 및 유관기관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성추행 피해 전담 신고 및 상담 서비스 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을 벌던 피해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가 있거나 돌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제공하는 제도도 포함되었다.
-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모든 수준에서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지난 몇 년간 스페인

에서는 성적 다양성에 관한 교육이 큰 화두였다. 작년 초, 스페인 자치주 중 하나인 무르시아(Murcia)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 예를 들어 성적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수업시간에는 부모가 원하면 본인의 자녀를 수업을 듣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중앙정부 측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고, 무르시아 주민 수천 명이 집결하여 대규모 거리행진 시위를 개최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 이후 작년 연말, 스페인 의회는 새로 개정한 교육법을 가결시켰으며 6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교육 의무화, 동 법안에서는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교육 결정 및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교육제도에서 부모의 개입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보수 주의 성향의 정당, 학부모 연합, 교사연합, 종교 단체 등 일각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사회 규범 가치를 주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에 관한 교육 의무화 도입을 반대했다.
-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법안은 성폭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합의 여부를 명백하게 중점에 두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데다,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및 예방 관련 정책을 보다 폭넓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 의회에서 최종 논의 및 투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본 법안의 가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AP(2021. 7. 6.), "Spanish govt endorses clearer, tougher law on sexual consent," <https://apnews.com/article/europe-sports-government-and-politics-e49431031dc10f279809a9d0ae4fff03>, 접속일자: 2021. 8. 20.
- El Pais(2021. 7. 7.), "Spain approves sweeping sexual violence protection bill: "We don't want any woman to feel alone," <https://english.elpais.com/spain/2021-07-07/spain-approves-sweeping-sexual-violence-protection-bill-we-dont-want-any-woman-to-feel-alone.html>, 접속일자: 2021. 8. 20.
- France 24(2021. 7. 6.), "'Only yes is yes': Spain moves to tighten rape law,"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10706-only-yes-is-yes-spain-moves-to-tighten-rape-law>, 접속일자: 2021. 8. 20.
- Ministerio de Justicia(2013), "Criminal Code,"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6443/file/Spain\\_CC\\_am2013\\_en.pdf](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6443/file/Spain_CC_am2013_en.pdf), 접속일자: 2021. 8. 20.
- NPR(2019. 6. 21.), "Spain's Supreme Court Reverses Earlier Decision, Convicts 'Wolf Pack' Of Rape," <https://www.npr.org/2019/06/21/734843639/spains-supreme-court-reverses-earlier-decision-convicts-wolf-pack-of-rape?t=1629063035841>, 접속일자: 2021. 8. 20.
- Reuters(2020. 1. 21.), "Spain's new government spars with right on region's sex education veto," <https://www.reuters.com/article/uk-spain-rights-education-idUKKBN1ZK241>, 접속일자: 2021. 8. 20.
- Reuters(2021. 7. 6.), "Spain says non-consensual sex is rape, toughens sexual violence law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pain-says-non-consensual-sex-is-rape-toughens-sexual-violence-laws-2021-07-06>, 접속일자: 2021. 8. 20.

## 캐나다 성폭행 통계 현황과 대응<sup>5)</sup>

- 캐나다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성범죄가 실제보다 통계에 과소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꾸준히 공론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 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경찰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더러 설사

5)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Fellow)



경찰이 인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2014년 캐나다 일반 사회 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통계에 의하면 성폭행이 아닌 여타의 폭행 사건은 실제 발생한 사건의 38%가 경찰에 신고된 반면, 15세 이상이 피해자였던 성폭행의 경우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의 5%에 그쳤으며, 이러한 성폭력의 과소 인지 경향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 그러나 캐나다의 주요 범죄 통계로서 캐나다 범죄통계센터(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CCJS)가 집계, 배포하는 중앙 범죄 조사(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UCR Survey, 이하 UCR 범죄 조사)에서는 GSS 통계와는 달리 캐나다의 성폭행 건수가 2004년부터 10년간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이렇게 UCR 범죄 조사 통계가 일반 사회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마치 캐나다 사회에서 성폭행이 줄어든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이 통계가 경찰이 인지한 사건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상당수의 성범죄가 이 UCR 조사 통계 자료에는 누락된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범죄 통계에 반영된 성폭행은 실제 사건의 약 10%만이 집계된다고 보면서, 성폭행(sexual assault) 통계는 UCR 조사 통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자신의 성폭행 경험에 대해 직접(self-reporting) 대답한 문항이 포함된 일반사회조사(GSS) 통계를 취합할 때 좀 더 실제에 근접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 성폭행 범죄가 통계적 과소 대표되는 이유로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의 다수가 친구, 친척, 이웃, 배우자 등 면식범이라는 점 등의 젠더 규범적 측면이 역할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사회에서 이슈가 된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과소 대표 경향을 악화시켰냐는 것이었다. 요컨대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시키고 범죄 통계에도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간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는 하였으며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사건들을 근거없는(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종결해 왔다. Unfounded로 분류된 사건은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일종의 암수 사건인데, 문제는 경찰이 인지한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하는 경우가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빈번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범죄 통계 센터는 1962년부터 unfounded 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왔으나 경찰이 특정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모든 경찰서에서 unfounded 사건을 보고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건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더라도 일괄적으로 CCJS(캐나다 범죄통계센터)에 보고되고 있지 않아 통계수치를 신뢰 할 수 없다고 판단, CCJS는 2006년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캐나다 언론사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이 성폭력에 대한 경찰 데이터를 입수, 분석하여 기획 보도를 내 이 이슈를 공론화 시켰다. 글로브 앤 메일 보도에 의하면 캐나다 전국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5분의 1이 unfounded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이들의 호소가 경찰에 의해 쉽게 무시되고, 이렇게 묻힌 사건들은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다는 것이다(The Globe and Mail, 2017).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신고된 성폭력 사건 중 unfounded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큰데, 예컨대 뉴브런즈윅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달했으며, 온타리오주에서도 30% 이상을 기록한 지역들이 많았다. 이 기획 보도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통계 집계에 이르기

까지 성폭력 범죄의 실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있었을 보여주었기에 캐나다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또한 이 보도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 수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수사관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어떠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짐을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취재진은 일선 수사관들의 분류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데 동의(consen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CBC, 2019). 캐나다 형법은 성폭력 범죄를 구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적극적인 의사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거나 하면 사건을 자세하게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 수사를 종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폭력 담당 일선 경찰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또한 요인이다. CBC 보도로는 수사관 한 명이 1년에 다뤄야 하는 사건이 80개에 다다랐으며, 과중한 업무의 압박은 수사관들이 손쉽게 사건을 종료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BC, 2021).

- 글로브 앤드 메일 보도 이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슈가 공론화되자 캐나다 경찰은 unfounded로 분류되어 수사가 종료된 성폭력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 보도 당시 unfounded 사건의 비율이 70%에 달했던 온타리오 해밀턴(Hamilton)시의 경우 unfounded 사건들을 재검토, 여섯 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으며 그중 한 건의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사안의 사회적 공론화 이후 경찰은 성범죄 담당 수사관을 매년 증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 이후 캐나다 경찰이 특정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그 접근법을 바꿨다는 것이다. 2017년 이전에는 개별 수사관이 단순히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손쉽게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는데, 2017년 이후 캐나다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은 이상은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도록 수사 및 사건 분류 방침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꿨다. 또한 CCJS 에서 전국의 수사기관을 상대로 워크숍을 실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온라인 훈련 툴을 수사 현장에 도입하였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또한 그간 손쉽게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 종결되어왔던 성폭력 사건들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툴인 Violence Against Women Advocate Case Review(VACR) model을 도입하였다. 오타와 여성 폭력 근절 단체 연합(Ottawa Coali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OCTEVAW)과 함께 개발한 이 모델은 경찰 외부에서 젠더 관점을 가진 제3자 전문가들이 경찰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이다. 여성부의 주도하에 젠더폭력 전문가들이 19개의 리뷰 사이트를 생성,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지역 경찰들과 함께 성폭력 사건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하여 수사와 피해자 구제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경찰 간의 협업 촉진하였다(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2021). 캐나다 여성부는 이 프로젝트를 2019년까지 진행하였다.
- 캐나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이후 하비 와인슈타인(Harvey Weinstein) 사건 등으로 본격적으로 촉발된 미투 시국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에서도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나 이들 사건이 unfounded로 분류



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다(CBC 2019). 2017년에는 경찰에 신고된 전체 성폭력 사건의 14%가 unfounded로 처리되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19% 감소했다. 특히나 심각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unfounded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었다. 해밀턴시의 경우 2014년에는 410건의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6%만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반면, 2019년에는 433건의 성폭행 사건 수사 중 154건의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CBC 2021).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여전히 성범죄가 시스템적으로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단순 침입(breaking-and-entering)이나 몰래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와 관찰하는 등의 행위들은 여전히 범죄 통계에서 성범죄로 포착되지 않고 미수(attempt)나 경범죄(mischief), 무단침입 등의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사건 발생 시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느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 침입 등의 경범죄가 성적 동기와 연관성이 강하고 이런 범죄들이 결국은 강간 및 연쇄살인 등의 강력범죄형 성범죄로 발달해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Beauregard et al. 2018), 경찰이 이들을 경범죄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잠재적 강력 성범죄자로 진화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들 가해자들의 DNA를 수집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rntfield 2018).

#### • 참고문헌 •

- CBC(2019. 7. 23.), "1 in 7 sexual assault cases in 2017 deemed 'unfounded': StatsCan," <https://www.cbc.ca/news/politics/sexual-assault-unfounded-stats-1.4757705>, 접속일자: 2021. 6. 19.
- CBC(2021. 11.), "Review team for 'unfounded' sexual assault cases hasn't met in a year," <https://www.cbc.ca/news/canada/hamilton/sexual-assault-community-review-team-sacha-hamiltonpolice-1.5849342>, 접속일자: 2021. 6. 19.
- 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2018. 7. 12.), "Revising the classification of founded and unfounded criminal incidents in the 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https://www150.statcan.gc.ca/n1/pub/85-002-x/2018001/article/54973-eng.htm>, 접속일자: 2021. 6. 19.
-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21), "Bring Justice to unfounded cases of sexual assault," <https://women-gender-equality.canada.ca/en/funding/stories-impact/coalition-ottawa.html>, 접속일자: 2021. 6. 19.
- The Globe and Mail(2017. 2. 3.), "Unfounded: Police dismisses 1 in 5 sexual assault claims as baseless,"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investigations/unfounded-sexual-assault-canada-main/article33891309>, 접속일자: 2021. 6. 19.
- Department of Justice, "An Estimation of Economic Impact of Violent Victimization in Canada, 2009," [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victim/rr14\\_01/p10.html](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victim/rr14_01/p10.html), 접속일자: 2021. 6. 19.
- Michael Arntfield(2018), "How Police Underestimate Break-ins as Gateway Crimes for Sex Predators,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how-police-underestimate-break-ins-as-gateway-crimes-for-sex-predators-95102>, 접속일자: 2021. 6. 19.
- Beauregard, Eric, Matt DeLisi, and Ashley Hewitt(2018. 12.), "Sexual Murderers: Sex Offender, Murderer, or Both?," Sexual Abuse 30, no. 8: 932-50, <https://doi.org/10.1177/1079063217711446>, 접속일자: 2021. 6. 19.

## 캐나다 정부의 아이 돌봄 정책 개편

- 캐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아이 돌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2021년 7월 8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수상은 아이 돌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캐나다의 만성적 아이 돌봄 서비스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일자리를 창조하여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 밝혔다(Prime Minister

of Canada, 2021). 총리는 또한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나섬으로써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아동들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그간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 동안 망가진 캐나다 경제 회복 계획의 방향성으로서 페미니스트적 회복(feminist recovery)이라는 구호를 제시 해 왔는데, 아이 돌봄 영역에의 투자는 캐나다 정부가 페미니스트적 회복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보여준다.

- 캐나다는 지난해 3월 사상 최초로 미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이후 근 1년간 봉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었었다. 그러나 4월을 지나 5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여 7월 2주차에 들어서는 일일 확진자가 3백 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시민권이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총인구)의 약 70%가량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50%가 2차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온타리오(Ontario)주의 경우 애초 예상보다 약 일주일 정도 빨리 3단계로 진입, 7월 중순 현재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고 체육시설 등이 다시 오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전역에서 9월 가을 학기가 시작할 때 즈음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도 완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가 빠르게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경제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아이돌봄 제도 개편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팬데믹 이전에도 캐나다의 학계와 시민 사회는 돌봄 인프라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단적으로 캐나다 타 주들에 비해 탄탄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데이케어 일일 비용이 평균 8달러에 머물고 있는 퀘벡주의 경우 여성들의 평균 고용률이 캐나다 평균보다 5%p 높다(The Tye 2020). 현 캐나다의 집권 여당(NDP)은 지난 수년간 아이 돌봄 제도를 개혁할 것을 약속해 왔지만 돌봄이라는 의제는 늘 항상 다른 의제들에 비해 우선 다루이지 못했다. 그러나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퀘벡을 제외한 타주들의 열악한 아이 돌봄 인프라는 팬데믹 동안 캐나다 여성들에게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라는 결과로 돌아왔는데, 과거 캐나다의 경기 불황 시기에는 주로 남성들이 대량 실업의 고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지난 1년간의 팬데믹은 여성들에게 직격타를 날렸고 잘 갖춰지지 않은 돌봄영역은 여성들,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희생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경이 봉쇄되고 락다운이 시작된 2020년 3월 여성의 고용률은 바로 전 달인 2월에 비해 5.3% 하락했지만 남성의 고용률은 3.2% 하락하였으며, 여성들이 서비스업 등의 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만큼 저소득계층 여성의 피해는 더욱 커져 작년 3월 저소득계층 여성의 고용률은 무려 14% 하락했다(LMCI, 2021).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돌봄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 쉬세션(she-session: 팬데믹 불황의 젠더적 함의를 인식하는 용어)으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은 올해 4월 향후 5년간 데이케어 개혁을 위한 270억 2천만캐나다달러(약 24조 4,813억원)의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 연방의회에서 이를 빠르게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2022년까지 아이 돌봄 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2026까지 캐나다 전국적으로 일 10달러의 데이케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 비록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 돌봄 예산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책정은 되었지만, 캐나다가 전국 규모의 아이 돌봄 개혁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 트뤼도 수상은 캐나다 전 주를 순방하고 있으며, 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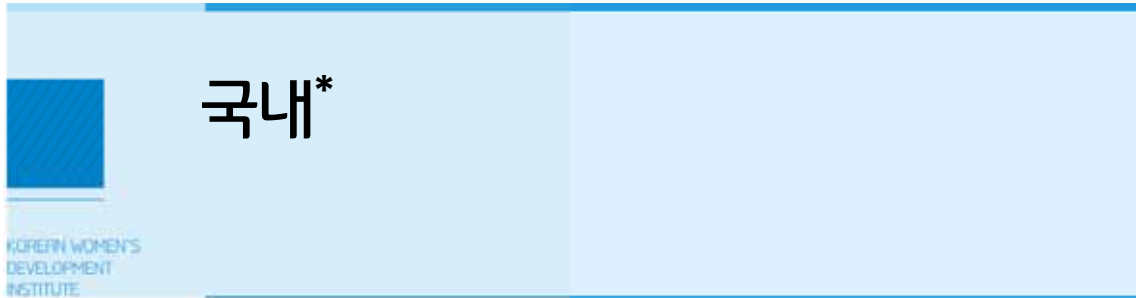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와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가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한 상태이다. 지난 7월 8일 캐나다 주들 중 처음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30억 2천만캐나다달러(약 2조 8,801억원)의 예산을 을 향후 5년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투입하여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개선하고 유연하며 포용적인 아이 돌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게 된다. 이 협약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향후 5년간 6세 이하의 아동을 데이케어를 보내는데 부모들의 부담을 평균 일 10달러로 낮추자는 목표에 동의했다. 또한 이 협약으로 2022년 말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6세 이하 아동 부모들의 아이 돌봄 평균 지출 비용이 50%로 줄어든 것이며, 향후 5년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약 30,000개(7년 후에는 40,000개)의 아이돌봄 기관이 생겨날 것이다. 이 신생 돌봄 기관들은 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투자에 초점을 맞춰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게 될 것이다. 7월 8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의 협약을 발표하면서 트뤼도 캐나다 수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는 캐나다 사회에서 고질적인 것이었지만 팬데믹 동안 캐나다는 값싸고 질 좋은 아이돌봄 서비스 없이는 캐나다인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것 배웠다고 밝히면서 아이 돌봄 인프라 개선이 페미니스트 리키버리(feminist recovery)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CBC.2021.7.8).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이미 일 10달러 데이케어 파일럿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선거에서도 이 파일럿프로그램을 주 전체에 확산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지사 또한 8일 연방정부와 협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팬데믹이 아이돌봄의 경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CBC, 2021. 7. 8.).

- 이어 2021년 7월 13일에는 노바스코시아가 두 번째로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했다. 이안 란킨(Iain Rankin) 노바스코시아 주지사는 7월 13일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905백만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데이케어 비용을 10달러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노바스코시아에는 아동들을 위한 9,500개의 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의 아이 돌봄 영역에서 종사자들의 수급 부족 및 민간 데이케어와 공적 데이케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노바스코시아주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한하여 500달러를 지급하고 2022년까지 임금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 또한 발표하였다(The Coast, 2021. 7. 13.).
- 연방정부의 이번 정책안에 대해 매년 캐나다 전역의 데이케어를 분석해 온 오타와의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 대안 센터(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는 이번 1980년대 이래 캐나다 정부의 가장 야심차고 포괄적 아이 돌봄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CBC, 2021. 7. 8.). 현재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정부는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센터는 만약 뉴브런즈윅주가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할 경우, 2022년까지 뉴브런즈윅에서 영아를 데이케어에 보내는 부모들은 연간 5,000캐나다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 10달러 데이케어가 현실화될 경우 뉴브런즈윅의 부모들은 연간 약 7,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유치원 아동의 경우 현재 뉴브런즈윅에서는 아동 한 명당 연간 약 8,300달러가 드는데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2026년에는 이 비용을 연간 5,700달러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연방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에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주정부 선거가 올 가을로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가 선거 결과에 따라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선거 직전에 인기 몰이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이미 팬데믹 동안 희생이 너무 컸는데 정부로부터 도움이 제때 오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캐나다의 여러 주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들을 보편적인 10달러 데이케어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확실한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는 비판이 있다(The Coast, 2021. 7. 13.).

• 참고문헌 •

- CBC(2021. 7. 8.), "Federal, B.C. government's reach deal on child-care funding,"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trudeau-horgan-bc-childcare-funding-announcement-1.6095101>, 접속일자: 2021. 7. 19.
- CBC(2021. 7. 19.), "What \$10 a day in child-care costs could mean for parents if N.B. sings up for federal plan," <https://www.cbc.ca/news/canada/new-brunswick/reduction-child-care-cost-new-brunswick-1.6108311>, 접속일자: 2021. 7. 19.
- LMIC(Labour Market Information Council, 2021), "Women in Recessions: What Makes Covid-19 Different?," <https://lmi-cimt.ca/publications-all/lmi-insight-report-no-39>, 접속일자: 2021. 7. 19.
- Prime Minister of Canada(2021. 7. 8.), "Canada announces historic first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greement,"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1/07/08/canada-announces-historic-first-early-learning-and-child-care>, 접속일자: 2021. 7. 19.
- The Tyee(2020. 1. 24.), "These policies could help end single-parent poverty in BC," <https://thetyee.ca/News/2020/01/24/Policies-End-Single-Parent-Poverty-BC>, 접속일자: 2021. 7. 19.
- The Coast(2021. 7. 13.), "Trudeau calls NS child care funding key to 'a feminist recovery' from COVID, Read more at," <https://www.thecoast.ca/halifax/trudeau-calls-ns-child-care-funding-key-to-a-feminist-recovery-from-covid/Content?oid=26780018>, 접속일자: 2021. 7. 19.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 여성가족부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업무를 본격화
  -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희망 기관 수요를 받아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6. 17.]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7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76)

### 2021년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모

-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수)부터 8월 24일(화)까지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한다고 밝힘.
  - 공모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등 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
  - 가족친화제도 적극 도입운영을 통한 일·생활 균형 촉진, 코로나 장기화 대응 유연근무 확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 직원만족도 향상, 가족친화 관련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6. 22.]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8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87)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

-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수)(한국시간 기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여성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이하 ‘(가칭)유엔위민 CGE’)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인 유엔위민 CGE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로,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 기능을 수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6. 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9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92)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40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는 33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했다고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6. 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9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93)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논의
  -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6. 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8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83)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시행령 개정은 2020년 6월과 2021년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5)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답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7.]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6)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중단,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기정예산(4.5억 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6,000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을 받아 2021년 9월부터 상향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24.]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SSGcQ+02r8pKjBgVmtwKZUgw.mogef11?mid=news405&bbtSn=70795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SSGcQ+02r8pKjBgVmtwKZUgw.mogef11?mid=news405&bbtSn=707951)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 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 지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 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22.]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SSGcQ+02r8pKjBgVmtwKZUgw.mogef11?mid=news405&bbtSn=70794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SSGcQ+02r8pKjBgVmtwKZUgw.mogef11?mid=news405&bbtSn=707948)

### 여성가족부,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17개 시·도 여성 고용정책 추진상황 점검

-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함.
  - 2021년 상반기에는 △추경을 통한 여성일자리 약 3만 7천 개 이상 추가 창출, △새일 여성인턴 7천 7백 명 연계지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9만 9천 명 생계비 지원, △가사근로자법 제정, △309개 사업장 재택근무 종합 자문(컨설팅) 실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15개소 확대와 17개 시·도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특화 사업 운영 등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27.]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5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54)

## 여성가족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 발표

- 여성가족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과제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모든 가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
  - 노동 공급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과학기술을 포함한 미래 분야 진입 지원
  -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노력
  -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리모델링 등 서비스의 질과 이용 부모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7. 28.]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5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53)

##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8월 2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실시
  -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태와 수요 파악을 실시
  -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만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통계진흥원이 조사를 수행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용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8. 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6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67)

## 2021년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 2021년 1분기 기준 상장법인 2,246개의 여성임원 비율은 5.2%로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 152개 중 85개는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8. 5.]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7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78)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과 구직급여 및 출산(유·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해 고용안정 및 모성 보호 강화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가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8. 17.]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0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01)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
- 개정안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도 규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6. 22.]

####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144](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14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6. 30.]

####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243](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243)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입양 희망 친생부모에게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화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은 이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 제공 의무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6. 30.]

####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242](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242)

###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 지원 등 보완

- 보건복지부는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논의
- 신고 후 초동 대응 외에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의 제도 개선 포함
-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8. 19.]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913](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913)

## [행정안전부]

###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 가능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
-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 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 가능하며, 재혼가 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 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7. 4.]

• 참고문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85445](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lId=85445)

## [교육부]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 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 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21.08.24.]

• 참고문헌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821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통계청]

###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결과

- 통계청은 가계생산, 무급 가사노동가치 등을 추계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결과를 발표
-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원(5년 전 대비 35.8% 증가)이며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가치 비율은 2004년(22.1%)부터 2019년(25.5%)까지 지속 적으로 상승
- 2019년 가정관리 부문의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5년 전에 비해 44.3%, 이동(가정관리·

돌보기)은 43.0% 각각 증가했으며 행동분류별 구조에서 가족·가구원 돌보기는 2004년부터 감소

- 2019년 남자의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5년 전보다 52.3%, 여자는 30.4% 각각 증가했으며 성별 구성비 변화는 남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 [통계청 보도자료, 2021. 6. 21.]

#### • 참고문헌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90183&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90183&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결과

- 통계청은 맞벌이 가구 비중과 1인 취업 가구 현황 등을 집계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발표
  - 유배우 가구(1,233만 2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 3천 가구로 전년대비 6만 9천 가구 감소하였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423만 6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16만 4천 가구로 전년대비 8만 2천 가구 감소
  -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년대비 17만 5천 가구 증가했으며 성별 가구 비중은 남자 56.7%, 여자 43.3%로 전년과 동일 [통계청 보도자료, 2021. 6. 22.]

#### • 참고문헌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9020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9020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